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정치인은 현수막 특권까지 누리나

요즘 거리를 지나다보면 각종 정치현수막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어떤 내용은 공감가고, 어떤 내용은 보고는 고개를 갇는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화가 치밀어오르고 불쾌해진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구청이나 시청에는 철거 민원이 쇄도하는 모양이다. 유권자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배나 늘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이 장소에 상관없이 거리 곳곳에 게시될 수 있는 것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동법 제3조), 금지·제한(제4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선거철도 아닌데 전철역, 버스 정거장, 아파트 입구 등에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이 내용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것이면 좋는데 정치적으로 악을 쓰거나 비아냥대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마전 환경부가 올 1~3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가 수거했다고 보고한 현수막을 집계했더니 무려 1300여개라고 한다. 현수막 하나 평균 무게가 600g인 것을 감안하면 200만장이 넘는다. 2022년 대선 때 수거한 현수막 1100여개보다 더 많다. 이런 현수막 제작비는 한 장당 10만원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국고 보조금이나 정치 후원금으로 충당하니 세금 낭비도 엄청난 셈이다.

민원이 속출하자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당 1개로 제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다. 정당 현수막은 민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주민 생활환경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의 단서를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 현재 행안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는 건 좋지만 질 낮은 구호들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원색적인 표현들이 피로감과 함께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내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가.

특히 쟁점이 되는 정치사안이 발생하면 토론을 해야 마땅한데 현수막으로 싸움을 하는 행태는 시민에게 피로감을 준다. 저쪽 정당

이 자극적인 공격을 하면 이쪽 정당도 그만큼 있을 수 없어 더 자극적인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쪽에서 화끈한 걸 내걸면 당원들이 '왜 우리는 가만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한다. 뉘가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능력해 보여서 자극적인 공격이 계속된다.

사실 법 개정 전 정당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지금의 현수막 공해는 지난해 여야 간 합의의 산물이다.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현수막 공해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가을부터는 현수막 난립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 현수막 금지 기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8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이 거리에 더 많아질 것 같다.

법을 만들었다더라도 국민이 불편하면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규모가 국민 정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 여야는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상업적인 현수막을 걸면 바로 때내면서 왜 정치인은 현수막 특권까지 누리야 하나.

社說

민주당 근본 바꾸는 전면적 혁신은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근본을 바꾸는 전면적 쇄신을 선언했다.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을 기치로 내세웠다. 첫 의제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논의한 뒤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코인 투자'와 함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 원인으로 꼽았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개혁도 예고하고 나섰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방침으로, 100% 국민경선 도입 여부 등이 주목된다. 10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광주·전남 정치권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입지자들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정책 발표에 공들이는 등 분주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만큼 공천 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원내 최다수 의석

을 점유한 제1야당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총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을 목전에 두고서 정치 혐오가 날로 확산되는 것이다.

특히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쳐야 한다. 비명계는 벌써부터 위원 7명 가운데 일부가 이 대표와 가깝다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추가 선임에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 빛이 없는 사람이다. 계파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는 김 위원장의 직설이 결코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근본부터 확 바뀌어야 한다.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내며, 예고한 대로 총선 공천에서도 기존의 구태를 일소해야 한다. 일체의 온정주의, 관용은 안 된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구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다. 책임있는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광주·전남, 그리고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국립대 위주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아쉽다

전남대 혁신기획서는 AI 융복합 허브인 광주 캠퍼스와 신기술 첨단산업 벨트인 전남캠퍼스 특성화로 초격차 대학 구축을 비전으로 담았다. 순천대는 중소기업,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특화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내걸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에 단독으로 참여한 전남대와 순천대가 포함됐다. 양 대학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예비지정 신청에는 전국에서 108개교가 97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경쟁이 뜨거웠다. 광주·전남지역에선 14곳이 참여했지만 국립대학 2곳만 첫 관문을 넘었다. 사활을 건 사립대학은 허탈해하고 있다. 조선대는 조선간호대와 통합을 제시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전국적으로 기획서 기준으론 국립(연합 포함) 8, 사립 7곳 등 15곳이 선발됐고, 대학 수로 보면 19곳이며, 국립 11, 공립 1, 사립 7곳이다. 교육부는 혁신

성 위주로 평가했는데, 거점 국립대의 통합·혁신 모델이 좋았기 때문에 다소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영 형태나 규모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줄로 세웠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 사립대들은 국립대가 또 다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울상짓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내·외부 벽 허물기,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예산 등을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달라고 있다.

글로벌대학30은 올해와 2024년 각각 10개, 2025년과 2026년 각각 5개 내외가 연차적으로 선정되며 학교별로 5년간 1천억원 정도를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와 심각한 재정난 속에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는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혁신은 필수불가결하다. 마땅히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대학을 배려하지 않은 이번 예비지정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기고



강병길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 미래가 아닌 현재의 행복을 지원해야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것이 청소년수련 활동이다. 이에 시설, 설비,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청소년수련 활동이다.

전국에 청소년수련시설은 839개의 시설이 있다. 이 중 광주지역에는 최근 생겨난 청소년 문화의집이 개관하면서 17개의 청소년시설과 2개의 자율공간이 생겨나고 있으며 동구 산수동과 광산구 송정리에 문화의 집이 개소될 예정이다.

"선생님! 집에서 수련관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 해요.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이 수련 시설 담당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1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우리 지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최근 저녁 산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참 대견하구나! 그래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스포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심카드 없었는데 학교 관계자가 와서 "너희 어떻게 들어왔어! 지금은 축구를 할 수 없어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듣고 참 아이러니했다.

청소년들은 가도등 불빛 아래 컴컴한 운동장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옆에 체육관에서는 불을 환하게 비추고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 일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야간에는 혼자 있어 관리가 어렵다. 만약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하면서 오히려 필자에게 핀잔을 줬다.

학교 공간은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안전을 이유로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면 도대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정한 문화의집이 동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자율공간 2곳(광산구·북구)에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자율공간을 학교시설에 설치해 청소년지도자가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신청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가깝고 친근한 시

설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맞잡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배운다면 청소년에 행복한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한 달에 10번 체육활동을 하며 한 번에 평균 1시간 30분을 할애한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다양해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학교체육 영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청소년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3일 청소년총회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보장과 전용공간(단지) 조성'을 해달라는 서구청소년참여위원회 김태운 위원은 학교 정규수업 외에 야간 자율학습 보충학습에 대해 청소년 본인의 의사결정보다는 학교장과 선생님의 의사결정으로 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제한적이라면 청소년들이 여가(생일파티, 취미, 스포츠, 오락 등) 보낼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 전용 단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파악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은 우리에게 미래가 아니라 청소년은 현재에 행복해야 한다.

독자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량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에어컨 과열 또는 차량 내 인화성 물질 폭발로 인한 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덥다고 차량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잠이 들 경우 내부공기 감소에 따른 질식과 저체온증에 의해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이 있을 때 너무 추운 에어컨 냉기를 느끼면 졸인다가 팔 수 있지만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깊어 의식이 없을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다. 특히나 공기순환이 자유롭지 않은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에어컨 가동 후 취침은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너무 냉각시킨 차량내 실내온도는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 실내 온도가 엄청 치솟고 있어 손을 가져다 대면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운 경우가 흔한데 라이터나 방향전

등 가스를 이용한 제품을 차내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어 자칫 고온에 의한 폭발로 이어지면서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차량 내 질식 화재사고, 사소한 안전 불감증은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켜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금하고 운전 중에도 수시로 내부 공기를 환기시키는 절대 안전수칙을 지키자. <김덕철·무안경찰서 교통안전센터장>

그래픽 뉴스

스마트폰 등으로 성폭력 피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 경험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유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높고,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허위 영상물 유통(0.3%), 강간(미수 포함) 0.2%

수사기관을 통한 대응은 2.6%, 1.4%, 3.2%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응답 비율은 전체 2.6%, 남성 1.4%, 여성 3.2%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정책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위한 정책 마련 16.7%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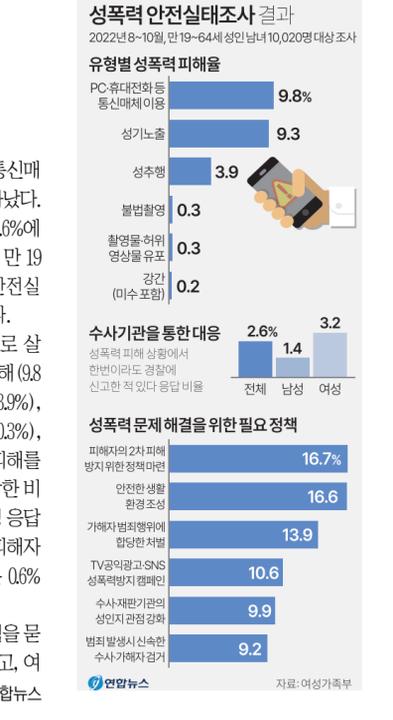
가해자 범죄행위에 합당한 처벌 13.9%

TV·영상·SNS 성폭력방지 캠페인 10.6%

수사·재판기관의 성인지 관점 강화 9.9%

범죄 발생시 신속한 수사·가해자 검거 9.2%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남성 응답자는 모두 '없다'라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21.1%가 '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설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제)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